고령화의 그늘 전남, 평생교육이 미래다

특별기고

강정일
전남도의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 이후 삶 고민·대응 시급

특히 전남도는 이미 2023년 기준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26%를 넘어서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남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단지 생존이 아닌 '삶의 질' 측면에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고민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지고 있다.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구성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재편을 요구하는 중대한 과제다. 고령 인구의 급증은 일자리, 의료,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 영역은 지금껏 초·중등 및 청년층 중심의 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교육, 즉 평생교육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평생교육은 단순히 여가를 보내거나 취미를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꾸준히 참여한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사회적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1.6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이 단순한 학습의 범위를 넘어, 고령층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신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고, 자기계발과 사회참여에 적극적이다. 은퇴를 단절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등장은, 고령층 평생교육 수요의 폭과 질이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남의 현실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2025년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91억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대비 0.17%에 불과하다. 평생교육 예산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고령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더구나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접근성이 낮고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어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경우 교통과 시설 접근성 문제로 인해 교육 참여가 더욱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역특성 반영 정책 전환해야

이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복지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공공서비스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존 교육시설을 평생학습 시설로 재편성하고,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 교육,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는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전남도 역시 기존의 초·중등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예산의 재조정뿐만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지역사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이 지금 바로 필요하다. 이는 전남이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전라남도의 평생교육이 활발해질 때 비로소 모든 세대가 공존하는 미래가 현실화될 것이다.

신안교통재단, 군민만족 교통복지 제공

기고

박종원
신안교통재단 이사장

섬에서의 교통은 그 자체로 인권이자 복지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동권 보장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1,025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열악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재정력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재단을 설립했다. 공영선박의 전문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난 2일 신의면 동리 선착장에서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희망을 띄웠다.

(재)신안교통재단은 군이 100%를 출연했다. 잦은 결항, 시설의 질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 그동안 민간 선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운항 시간 지연, 고장·검사·점검 등 군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군 소유의 공용선박을 '신안군도선운영협의회'에 위탁운영 했으나 전문성, 책임감, 안전성 등의 다양한 문제들도 대두됐다.

교통재단은 해상교통의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과 편리성을 한층 높인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4기 '신안군 여객선 야간운항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2007년 1월 18일 전국 최초로 목포~압해 야간운항을 개시했다. 현재 모든 읍·면으로 야간운항을 확대했다.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방문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당시 해상교통의 불합리한 규제 등의 개선을 위해 해수부를 수차례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도 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까지는 쉽지만은 않았다.

국가가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책임질 수 없다면 섬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편이 당연시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신안군의 사례는 최근, 연안여객선을 운항하는 타 시·군의 롤모델로 떠올랐다. 여객선 야간운항으로 연륙이 되지 않는 도서 주민들은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부속 도서와 섬 간에는 도선과 행정선을 투입해 이동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4개 읍·면 중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왕래할 수 없었던 도초-하의면과 증도-자은면에는 군에서 직접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영세한 선사들로 인한 잦은 결항과 운항 포기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적자 노선은 항로권을 인수해 완전 공영제 확대에 전력을 쏟고 있다. 적자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남신안농협 여객선 1·2·3호를 지난 4월 신안군에서 인수하고 등기 절차 등을 완료해 천사1·2·3호로 명명했다.

천사 1호는 364톤급, 천사 2호는 486톤급, 천사 3호는 720톤급 등이다. 총여객 1,027명, 차량 119대를 수송할 수 있는 규모로, 천사1·3호는 하의~신의~장산~목포 항로를, 천사 2호는 안좌에서 장산·신의·하의 간을 신설 운항한다. 남부권 항로 여객선 공영제를 통해 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의면과 신의면, 장산면 주민들을 위한 야간 여객선 운항 시대 완성이 머지않았다.

신안군 교통재단은 공영선박의 운영과 관리에서 전문성을 갖춘 책임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도서 지역의 공공성을 지닌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제 기능이 목표다.

가중되는 재정 부담보다는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신념이 우선이다.

교통재단과 신안군은 완전 공영제로 섬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꿔가겠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세웠다. 여객선과 도선의 관리와 운영 등을 경제 논리보다는 안전성 확보 원칙에 따라 기존에 부족했던 점검과 정비 강화에도 나선다.

군민들과 이용객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섬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편이 당연시되는 시대는 이제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섬사람들에게 교통은 그 자체가 소득이자 복지며 행복이다. 신안교통재단은 군민의 편안함을 위해 늘 곁에서 최선을 다할 각오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광주시 상대 무분별한 법적 소송 자제를

광주시가 민선 8기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당선작 선정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라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결과다. 하지만, 씁쓸한 뒷맛을 숨길 수 없다. 이번 사례뿐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분별할 정도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풍조 때문이다.

이번 설계 공모 당선작 논란은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과 관련, 설계 공모 심사 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입찰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당선작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시가 설계 공모는 디자인의 우수성, 창의성, 계획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2등 입상 업체에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법원으로 문제를 끌고 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입찰 과정에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업 차질은 물론 죄 없는 광주시만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우리 사회의 '불복' 문화가 아쉬운 대목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비단 이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및 용역 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무려 8건에 달했고, 모두 기각됐다. 더구나 가처분 신청은 주로 적격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낙찰 순위에서 밀린 업체들이 제기했다. 나만 옳고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그릇된 아집이나 다름없다.

광주시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계약은 공모나 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사법상 계약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지키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만일 광주시가 공정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터져도 벌써 터졌을 것이다.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모에 응모하는 업체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주장하는 행태는 수긍하기 힘들다. 결과에 깨끗히 승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전공의 복귀는 국민생명 지키는 소명이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병원들이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섰다.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면서 복귀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의료 정상화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인 만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얼마나 많이 병원에 돌아올지가 관심을 모은다.

전남대병원은 레지던트와 인턴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1년 차와 상급 년 차를 나눠 모집하는데, 1년 차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24개 과목에서 별도 정원 10명을 포함해 총 94명을 모집한다. 상급 년 차는 지난해 정원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또 전남대병원 본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 전남대병원 등에 배치할 상반기 인턴도 별도 정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0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도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 년 차를 추가 모집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9개 과목에서 1년 차 47명을 선발하고 상급 년 차는 지난해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광주기독병원도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 년 차를 각각 8명씩 추가모집 한다. 인턴도 1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공의는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전공의는 의료계를 떠받치고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의 복귀가 절실한 이유다.

병원에서 전공의가 떠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은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극심한 대립은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벌써 1년이 넘었다. 정부가 수련 특례를 적용하면서까지 전공의들에게 복귀의 문을 열어준 것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번 전공의 추가모집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의료계 주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와 인턴 수련 기간 단축 등 제반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단.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사진 속 세상

대통령경호처, 취임식 차량 퍼레이드 훈련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이 탑승한 차량들이 27일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취임식 차량 퍼레이드 훈련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